

KNSI REPORT

컨퍼런스

<제29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보즈워스 대북특사 방북 평가와 전망 □

일시 : 2009년 12월 14일(월) 15:00-17:1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 ▶ 사회: 김연철(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 토론: 정창현(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민족21 주간)
이정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최: 코리아연구원, 오마이뉴스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나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북한의 무기수출 수송기 사건과 북미관계

김연철(사회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부부터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보즈워스의 방북 시기에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발각이 되었다. 이 사건이 북미대화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으면 좋겠다.

정창현: 이번 사건이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대화 진행과 동시에 유엔 대북제재를 병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보즈워스가 방북하기 전부터 한미일 사이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문제, 북한의 핵 폐기 의사와 관련하여 대화의 진행국면에서도 기존의 미일제재는 바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제재가 병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조건하에 보즈워스 방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건(북의 무기수송기 발각)으로 북미대화 자체가 무산되거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반발 또는 항의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철: 미국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는 정 선생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6자회담 참가 의미가 없다’는 논리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의 개최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의 쌍방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단일 행위자의 의도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미국 내에(부시행정부 때와 같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번 계기가 미국 내부적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조율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연철: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보즈워스와 강석주 사이에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보즈워스 특사 방북과 6자회담 전망

김연철: 북한에게 일단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북미사이의 적대관계 청산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회담의 형식부터 먼저 논의해보았으면 좋겠다. 북미사이의 적대관계 청산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6자회담 재개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창현: 이번 회담이 끝난 후 보즈워스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기존의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에 나아가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수용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즈워스-강석주 회동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차이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북미간 차이점 중 첫 번째는 북의 6자회담 복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가이다. 북은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판단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의 6자회담 복귀의사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북의 6자회담 복귀 공식선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 유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후속회담이 열리게 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본다. 6자회담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북은 6자회담 복귀를 내부 방침으로 확정을 했다. 그러나 스스로 ‘끝났다’고 선언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참가국들이 이러한 ‘명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크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논의의 선후관계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보즈워스나 미국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6자회담의 별도 4자 토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체제 수립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6자회담 논의에 따라서 4자회담에서 과연 평화체제 문제가 올바르게 논의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북미간 접촉을 통해 합의하고, 그것을 4회담의 틀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명확한 미국의 의도-담보를 요구, 또는 먼저 평화협정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만 6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논의가 시작되면, 결국은 북이 공식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평화협정논의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으로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북미간의 평화협정 논의의) 첫 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결국 4자회담의 구성, 비핵화와 연결지점 등 미국의 평화협정 프로세스가 확인이 된다면, 양자(비핵화-평화협정)문제를 병행추진 방식으로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김연철: 지금 쟁점이 평화체제 논의이다. 북한은 북미양자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4자회담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간 쟁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설령 북한이 북미 양자 간의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명박정부가 그런 방식에 응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정철: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큰 쟁점은 협상의 형식이다. 미국은 6자틀 내에서라면 모든 중층적(양자, 4자)인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을 할 수 있지만 복다자회담(4자나 양자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병행 회담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6자틀 내에서 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즈워스가 방북 후 나머지 5개국에 설명한 것이라 판단된다. 어떠한 형식이라도 심지어 6자 틀 내에서일지라도 북미 양자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미관계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을 두고 이견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진행과정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 ‘국제 보수동맹’ 등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실제로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외교적인 이견 수준의 논란은 있을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김연철: 결국에는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과거(80년대)에 비해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DMZ의 관리권한이나 NLL 문제 등 평화체제 논의에서 초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역할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었거나, 이양 예정이거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처럼 대북역지의 대부분 역할이 한국군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 군사적 신뢰구축의 ‘당사자’ 문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초기부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단계에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겠는가. 한미 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책임감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 없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미 간에 논의가 될 텐데, 북한의 요구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정부가 이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정창현: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좋은점, 나쁜점이 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양면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평화협정 당사자문제는 이번 보즈워스 방북 때 북측이 먼저 4자 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의 주체로 체결 당사자는 4자(남, 북, 미, 중)가 맞다. 그렇다면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형식도 4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2 방식처럼, 북미간의 일정한 입장조율이 이루어지고 난 후, 다자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및 추진이 되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평화협정을 지향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2010년의 현실적인 목표가 과연 평화협정인가의 문제가 있다.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하여 NLL문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의 변화 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데, 과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NLL문제를 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평화수역’ 이라고 하는 절충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도 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렬되었는데, 지금 ‘평화수역’ 자체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NLL문제를 한국을 소외시키고 북미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오바마행정부의 국내기반이나 대외정책 지지도를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종전협정이 내년의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평화협정의 세부적인 논의는 한계가 없다. 결국은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관계정상화),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의 ‘입구전략’ 으로서 4자 정상 또는 4자 고위급 사이의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내년의 목표이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

이정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논의가 분리되고, 시간적 갭(GAP)이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인지는.

정창현: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에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즈워스가 방북 시 강조했고, 북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서 2005년의 9.19 공동선언은 대단히 잘된 합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이 2차 핵실험을 했고,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조건에서 9.19 공동성명 내용 중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재개시점에서 9.19 공동성명을 대체하는 성명이나 2.13합의와 같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합의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과거의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가 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먼저 북미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6자회담을 통해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6자회담을 이끌어가는 합의 또는 성명(안), 조치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북한은 보즈워스 이상의 고위급 회담(예-힐러리 국무장관)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6자회담을 끌어가는 합의가 내년 초에 예상될 수 있다. 물론 북은 이에 동의하나, 미국은 한미일 의견조율을 통해서 일치된 안을 가지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김연철: 9.19 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협상의 최종목표

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북미양국이 9.19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공감대를 모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고, 양측의 최종목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요한 합의문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2.13 합의 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북미 양국사이에 중간과정을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과 같은 방법을 논의할 수는 있겠다. 한국정부는 그랜드바겐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관리를 주장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미국정부 입장에서 9.19 공동성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종적 목표의 대부분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고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빗어낼 수 있는 혼란 등을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9.19 공동성명의 틀에서 논의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상황의 변화-북한의 2차 핵실험, 군축방식의 강조 등-가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는 것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철: 보즈워스 방북 후 결과보고를 보면, 검증가능성과 완전한 비핵화를 분리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보즈워스는 회견 과정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언급하고, 그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북과 합의가 안된) 목표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수준에서 2008년 중단된 6자회담 시기의 상황을 이어간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 생각되고, 그 안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필요 추가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6자회담의 모멘텀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대답을 하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과 상황의 변화, 미국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정 선생님 말씀처럼, 북이 원하는 것은 고위급의 방문을 통해 9.19를 대체 또는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또는 그 이상의 양자 간의 합의를 모멘텀으로 해서 6자회담으로 가는 방식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이 같은 북의 프로세스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의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벤트를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북미 예비접촉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연철: 결국에는 클린턴 국무장관도 보즈워스의 방북이 예비적 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논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 방식처럼 6자회담 대표인 성 김 중심의 실무적인 현안 위주의 논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화수준으로 전환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정창현: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한미일이 합의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부분에 집중해 있는 것 같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미국이 중심이 되어 검토했고, 이에 대해 한미일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틀에 대해서 보즈워스가 북에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 되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이행리스트를 북에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북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현재 한미일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 생각된다.

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화체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평화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대안이 없다는 것이 한미일의 상황이다.

최근 미·일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평화협정 논의를 대응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미일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문제를 던지고, 주한미군 문제, 군축 문제 등을 제기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인 판단(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동시병행,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미국입장에서, 한미일 협의과정에서 2.13 합의조치나 혹은 10.3 합의조치에 입각해서 2단계 조치의 핵 신고 단계에 들어왔고,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6자회담이 중단되어 있는데, 핵실험을 검증하는 문제까지는 북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한미일이 검증을 요구하는 수준의)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이행에 대한 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점이 종전선언 정도일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힐러리의 방북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받는다면,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프로세스(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결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검증문제를 받을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강히 거부하던 검증의 문제를 정치적 실익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미북간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정철: 6자회담의 급 자체를 차관보급으로 생각하시는지? 6자회담의 급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보즈워스가 방북해서 강석주를 만났는데, 미국이 방북 시에 강석주를 꼭 만나야 한다는 것을 11월부터 요구했었는데, (미국이) 대화의 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무라인에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는가.

정창현: 외교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강석주를 자주 보자고 하는 이유는 김계관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석주보다 더 센 국방위의 간부가 나와서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격과 관련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정철: 그저께 Foreign Policy 기사를 보면, 미국 대북정책의 총책이 스타인버그라고 나왔다. 쌍방이 그 정도의 최고 책임자를 간접적으로 밝힐 때는 실질적인 대화가 되려면 미국은 북한의 총책이 강석주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스스로 스타인버그가 총책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나서는 회담이 되어야 6자회담이 북한의 체면도 세워주고,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창현: 2007년 3월 경, 미 국무부의 부장관이 방한해서 ‘힐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문제, 평화체제 문제는 본인이 한다’ 고 말했다. 당시 미국의 생각은 6자회담은 철저하게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틀이었다는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문제는 최소한 북미간의 틀로써,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걸 통합해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 소화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일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섞을수록 진행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정철: 그래서 6자회담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큰 측면의 정

치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권력의 실세를 6자회담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지금처럼 차관보급을 그대로 두고 6자회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도의 진실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연철: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격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초기에는 미국 내 부처간 조율방식을 생각 한 것인데, 이번 방북단도 국무부와 NSC 등 각 부처의 비핵산담당자들이 대거 포함된 대표단으로, 범 부처 기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보즈워스가 앞으로 대북협상에 있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비핵화프로세스와 평화체제프로세스가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캠프벨이 맡고 있는 동아태차관보 차원에서 미일관계, 한미관계 등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차원에서도 전략측면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과연 지금의 특별대표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정도에서 대북(협상전략을) 코디네이팅(coordinating)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정철: 이번 접촉에 대한 규정을 힐러리가 ‘preliminary(사전접촉)’ 이라고 했다. 또 그 전에는 ‘북미간 두 번의 양자접촉을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보즈워스는 방북 후에 ‘추가접촉은 없다’ 고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부정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보즈워스의 입장에서는 두 번의 접촉 중에 사전 실무접촉을 책임지고, 이를 총괄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북특별대사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힐러리나 국무부 입장에서는 사전접촉의 성과가 있었다면 본게임(후속접촉)은 국무부가 직접 나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세 개의 표현(추가접촉은 없다, 두 번의 접촉, 사전접촉)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긍정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다.

정창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보즈워스의 사전접촉이 실패할 경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사전접촉을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겠다.

김연철: 미국의 외교는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대북 현안은 오바마정부에서 ‘꿈과 희망’ 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바마행정부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미흡한 부분들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의 야심찬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2010년의 일정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고려되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상 받은 값은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NSC가 잘 모이지 않는 것이다. 과거 부시행정부 1기에서 라이스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부시행정부 2기에 들어 미국 외교정책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북핵문제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 이는 대통령의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워싱턴 안에서의 입장정리나 우선순위에 있어 문제는 결국 오바마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정철: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 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 오바마 정부의 행보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담한 접근’ 과 같이 한다. 보즈워스의 역할을 관여정책이 아니라 관망정책(wait and see)으로 볼 수 있다. 이번 12월은 대북정책이 ‘관여정책’ 이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면, 미국 내에 내부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1월에 그것이 정립이 되어도 사실은 부시행정부에 비하면 6개월 이상 단축시켜서 정립을 한 것이다. 보즈워스의 역할을 관망정책의 책임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립되면 자신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김연철: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

정창현: 오바마행정부의 기본방침은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바마 색깔을 가진 대북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프로세스 전망

김연철: 그럼 다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은 역시 평화체제문제이다. 종전선언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고, 당시의 종전선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이유는 장기적인 평화체제의 과정 속에서 일종의 잠정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잠정적인 단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으로서의 평화체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검토가 되었던 것이다. 종전선언을 실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정전상태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개념의 종전선언을 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이다. 유엔사가 한국전쟁이라는 과정 속에서 ‘유엔의 결의’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유엔사의 법적지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종전선언을 할 때, 하나의 선언보다는 가능하면 2.13합의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초기 이행조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초기 이행조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당장 유엔사의 법적지위와 같은 문제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부딪히는 문제였다. 평화체제 초기 이행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안에서 혼란이 좀 많았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금 와서 어차피 그 부분의 진전을 가져오려면 입장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정철: 다른 효과(조건) 없는 ‘종전선언’ 자체도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창현: 유엔사 문제도 한미일 간의 조율을 통해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종전선언의 시점을 내년 봄(3~5월)으로 설정했을 때, 한미 간 조율도 그 때까지 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했다. 올해 중반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에게 종전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개념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이런 상황 하에서의 유엔사 문제, 군축문제, 주한미군의 문제가 연관된다는 사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종전선언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종전선언에 연관된 법적문제, 실제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못한다’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것이 안 되면, 다자가 모여서 일단은 종전선언을 하고,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진전시켜 나가서 평화협정까지 가기로 하였다든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의 북한이라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2012년을 경제재건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선언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북도 이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정철: 2010년 정전선언 -2012년 목표로 평화체제 논의는 넘길 수 있다는 것인지.

정창현: 평화체제 문제는 시한이 없다.

5. 북미, 북중, 북일, 남북관계 전망

김연철: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다. 그러나 6자회담의 전망에서 북미관계를 제외한 다른 양자관계 즉, 북중관계, 북일관계,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북일관계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창현: 북일관계는 대체적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해나간다’고 정리된 것 같다.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민주당 차원에서 북과 접촉해보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접점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교섭을 통해 총리 방북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11월 초에 일본 민주당의 밀사가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북일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정당 간에 교섭을 통해서 남북자 문제를 어떠한 선에서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될 것이고, 최근에는 북일 간 ‘납북자 문제 재조사 용의’에 대해 합의된 사안이다. 북측은 일본이 요구하는 재조사를 수용하는 것에 명분이 필요한데, 이를 ‘메구미’의 유골 반환과 이후 외국의 권위있는 기관의 재조사,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도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

김연철: 결국 북한이 북미관계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남북관계는 어떠한 시점에 와있는지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다시 대남 강경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예단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북한입장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철: 여러 개의 양자관계의 축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 6월 이후 북중관계는 정세변화의 축이라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했지만, 현재 미국에 대북접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된다. (‘G2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것의 배경이 된 것도 중국의 역할론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북중관계가 나쁘다고 해석하거나, 북미관계 진전에 뒤늦게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큰 문제가 없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중국의 존재나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는 사실 없기 때문에 북일, 남북, 북미 관계는 큰 틀의 대화 노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남측의 일부 보수세력과 일부 당국자들이 북에 대해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반북의식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정부도 대놓고 북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낼 수 없는 미중관계(북중관계, 미국의 대북정책, 최근의 북미 접촉 등)가 있고, 북한도 남한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 특히 쌀 문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나, 북미관계가 진척되는 시기에는 동시에 협상들이 진행되는 이런 국면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자꾸 통미봉남정책을 얘기하는데, 북한의 정책을 그렇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창현: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했던 성명이나 문서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북이 일관되게 북미-북일-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하고, 이것이 전술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외부적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동북아에서 이러한 방향의 대외정책이 평화체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북측이 주공전선인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를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구조에서 북한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한 견제장치로써 유럽-미국-남한-일본자본들이 균형적으로 북에 투자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외교노선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현인택장관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8월 이후에 남북 간 접촉이 결국 좌절됐는데, 그 원인을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통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보여진다.

참고로 북중관계 말씀하신 것은 지난 9월 이후(원자바오의 방북 결정)에 중국 공산당의 대북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핵심은 ‘현 단계 북의 행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2차 핵실험 시점의 중국의 대응, 유엔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등의 북중관계 갈등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 북중관계는 유엔제재와 관계없이 대규모 경협,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북의 경제 담당자들도 원자바오의 평양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적 전망이 회복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향후 북중관계는 북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연철: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이나 전술적 입장들은 예단이 가능하나, 결국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적 요인 또는 환경적 변화에 변화 여지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북미관계가 풀려나가면 한국이 따라가는 입장에서 대북정책도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정철: 결국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거부하는 일종의 ‘보수동맹노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핵심적인 외교기조가 ‘한미동맹 우선론’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대로 일관성있게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서 기존의 봉쇄정책이나 강경정책을 취한다고 고집부린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보수동맹’의 중심을 한국이 맡겠다는 것인데, 힘의 관점에서 이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북한이 여러 가지로 남측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창현: 8월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특사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남쪽의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에 북미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의 일부는 내년 북미대화를 앞두고 남북의 정상회담이 만나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해야만, 동북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대통령에 전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그 반면에 원칙적으로 북미대화가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북의 6자회담 복귀가 확인되는 시점에 남북대화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대립은 6자회담 재개, 북미관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문제의 논의가 시작되면 한국정부도 그 논의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남한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의 정치적 지형에서도 정부로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보수진영(정부, 한나라당 등의 여권) 내에서 남북대화를 지금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원칙적인 보수적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팽팽한 균형은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평화체제프로세스가 일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균

형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위급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성사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다시 남측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정철: 반 발짝 앞서가는 전략과 반 발짝 뒤에 가자는 전략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반 발짝 뒤에 가자는 전략은 정부 내의 인사들일 것이고, 반 발짝 앞서가는 전략이 기독교계 또는 여당 일부의 목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발짝 앞서가자는 얘기들인 것 같다.

6. 2010 한·미·일 3국의 선거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김연철: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내년 한반도 정세 전망에 있어 한국의 지방선거(6월), 일본의 참의원선거(7월), 미국의 중간선거(11월) 등 3국의 선거가 3국의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중요하다 생각된다.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변화의 기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큰 틀에서 일어날 변화들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일본은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외교전략으로서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미국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간선거에서 클린턴 집권시기처럼 패배하게 되면 오바마행정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대북정책을 이야기 하지만, 국내적인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필요가 과거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보자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나 ‘선거’라는 변수를 두고 현실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선거가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정철: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정책을 전환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선거연합에 유리한가의 문제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집토끼’는 워낙 ‘강성’이라 대북정책의 변화가 산토끼는 못 잡고 오히려 집토끼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토끼 결집과 산토끼 결집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용 대북정책 전환은 내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창현: 1차,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선거국면에서 북한 문제는 부정적인 사안이 아니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판도를 좌우할 수준은 벗어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그러한 유혹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명박정부가 6월선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의 선거가 중요하다.

일본 오자와 간사장이 직접 대북정책을 풀기위해서 드러낼 필요는 없고, 7월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북일관계가 촉진될지, 미국정치를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힐러리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는 것은 미국 대북정책의 흐름선상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4차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이야기 할 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북하거나, 중국 또는 판문점에서 4자간 합의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4자를 안에서 2자가 만나든지, 양자가 따로 접촉한다든지, ‘만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간선거에서 눈에 띄는 패배를 할 경우에 대단히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중간선거는 한반도의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미국의 외교관이 한 얘기이다. 오바마가 실제로 북에 갈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보았을 때, ‘갈수도 있는데,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

이 선 이후에’ 라고 답했다.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이 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하나는 선거 전에 오바마나 힐러리가 움직이는 것이 중간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 전·후 관계없이 내막적으로 합의된 상태라면, 선거 이후에 방북한다 하더라도, 선거에 지게 될 경우에는 방북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 본다. 어쨌든 선거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선거는 북미간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자체가 두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현재의 외교안보팀이 개편될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를 통해 전반부를 정리하고(내각의 변화, 또는 외교안보팀의 개편 등)으로 새롭게 이명박정부 2기의 대북노선, 대외정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한의 지자체 선거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7.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 와 북핵문제

이정철: NPT회의가 북미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과대평가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창현: 영향이야 주겠지만, 그리 클 것 같지는 않다.

김연철: 5월 NPT회의의 ‘핵 없는 세계’ 에 대한 외교적 비전이 있고, 이와 관련한 구성요소들 가운데 북핵문제는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정철: NPT회의가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창현: 지난번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할 때 협상 시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3월에 한미군사훈련이 있고, 6월은 보수진영에서 6.25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남측의 이러한 상황을 아는 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월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되고, 보즈워스 방북 후 미국이 빠르게 움직여 한미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북미간 대화가 가동되어 북이 보다 유연한 형태의 발언과 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도 추상적이더라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 다만 평화협정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도 검토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안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의 진전이 문서나 접촉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상반기의 긴장과는 다를 것이다. 올 해 상반기의 긴장국면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김연철: 저는 내년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바마행정부의 ‘핵없는 세계’ 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핵문제가 하나의 독립된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가지게 될 일종의 ‘핵 협상에서의 카드’ 에 있어서 플루토늄 보다는 우라늄 농축을 상당히 중요한 카드화 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또한 자체 경수로 건설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면서 농축 우라늄 방식의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내년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지지부진하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축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는 ‘이란’ 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란의 저농축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자체 경수로 건설을 위해 저농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란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북한도 세계적인 핵문제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이를 이용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내년 NPT나 핵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면한 이슈-북핵문제, 이란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아무리 미러간 전략 핵무기 감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다고 본다.

이정철: 일단 CVID를 말할 때 V(Verifiable, 검증 가능한)와 C(Complete, 완전한)를 분리하고 C(Complete, 완전한)는 미래과제로 둔 것 자체는 농축우라늄 문제와 경수로에 대해 당장 문제 삼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며, 협상과정에서 수정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김연철: 본질은 어차피 신뢰의 문제인데, 북미 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의 기준을 높일 것인가가 문제이다.

8. 북한의 화폐개혁 평가와 전망

김연철: 마지막으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화폐개혁 전망과 평가에 앞서,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언론보도 등-를 먼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정철: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많은 언론은 북한의 ‘돈주’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04-2005년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쌀의 수매가를 올리고, 전량 수매를 해서 배급을 하고자 했는데(당시 수매가가 올랐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배급 쌀값을 45원에서 시장 가격으로 올려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배급 쌀값을 올리면 생활비를 다 올려줘야 하는데, 북한의 재정상태에서 선순환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었다.(당시는 2004년 남북대화 쌀 지원이 중단되어 있었다.) 배급제 정상화 논리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배경으로 나온 것인데, 그 때 남한 언론은 노동당 60주년 기념으로 ‘배급제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그 조치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재검토하여 이번에 재실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2005년에 잠깐 쌀 지원 되고, 2006, 2007년에 지원 안 되다가 2007년 정상회담 이후, 2007년 말에 잠깐 또 쌀 지원 되고 2008년, 2009년 현재까지 계속 쌀 지원이 안됐다. 그리하여 연간 100만톤씩 모자라는 것이 누적되면서 쌀값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쌀값 인플레이 대책을 세우면서 2004-2005년에 검토했던 쌀값 인상과 생활비 인상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좋은 벼들’과 ‘NK데일리’의 보도를 보면, 생활비가 양강도에서 신화페로 400원, 쌀값이 23원(좋은 벼들), 환율은 신의주에서 38원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존화폐로 보면, 생활비 4만원, 쌀값은 2300원, 환율은 3800원이다. 최근의 시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평양의 노동자 임금이 구화폐로 월 3~4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재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화폐는 사용할 수 없고 1대 100 디노미네이션 한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치다. 사실상 (2002년) 7.1조치와 비슷한 성격을 띤다.

문제는 화폐개혁과정에서 10만원 이상의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자본박탈’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화폐개혁의 부수적 효과로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게 이번 조치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아니어야 한다. 현금 10만원이면 사실 3-6개월 정도의 월급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북에서도 이미 달러나 외화로 저축해온 사람들이 있고, 북한 돈으로 현금을 이 수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이번 조치가 일반 주민들을 적대시해서 겨냥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쌀 값 안정화 대책과 인플레이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화폐개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아닐까 한다.

또한, 시점이 ‘12월’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수매가 끝나고 실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매가격은 구가격으로 하고 쌀 배급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재정수입이 먼저 들어오고, 수매는 내년에 신화폐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시점이 12월로 정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김연철: 결국 임금, 쌀값, 환율을 다 리셋한 것이다. 리셋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 평가, 전망이 중요하다. 7.1조치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변화론 혹은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것은 우문이다. 지금 당장 실패해도 거기서 교훈 얻으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성공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 망할 건가 아닌가 하는, 종말론적 시각이 있다.(웃음) 화폐개혁을 가지고, 급변사태까지 말하는데, 왜 이렇게 종말론 시각으로 보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북한을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북한 불변론, 북한 절대 핵 불포기론은 일종의 믿음으로까지 보여진다. 그렇다보니, 북한의 경제·정치·외교 등을 분석할 때 종말론적 사고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7.1조치를 시행한지 7, 8년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망하냐 안 망하냐 논의하는 현재의 상황은 개탄스럽다. 화폐개혁 문제는 시간 관계상 앞으로 더 자세하게 다룰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다.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겠다. **KNSI**